시민일보 SIMIN NEWSPAPER
since 1994
시민일보 창간32주년
지방자치의 지킴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시민참여 정론직필

시민일보

섬김·모심·채움·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경민대학교
1·7호선 도봉산역
무료 통학버스 운행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 02)3676-2114 www.siminilbo.co.kr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제6379호

與, '공소취소' 빼고 정면돌파
野 "李대통령 재판 취소 입법"

與,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전
野 "사법부 향한 의회 쿠데타"
국회 전문위원 "공소취소 가능"

〈최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공소 취소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그대로 남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특검법의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계도 "최종적으로 특검을 골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인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특검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공소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해도 특검이 수사 시능만 한 뒤 예정된 대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 취소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들에게만 형사처벌 위험을 배제시키려는 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판·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공소 취소 박람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조항을 뺐다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조항이 없어도 공소 취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제 공소 취소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을 비틀 일만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공소취소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공소취소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사법부의 판결을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가운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모임인 이른바 '공취모'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안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공취모'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했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는 법치를 지키는 곳이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법사위가 공취모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국민의 힘이 (대통령)재판 지우기로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고, 수사 대상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강조했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376회 이뤄졌고, 법인카드(사용 내역)전표 하나하나에 대한 압수수색은 100여 차례"라며 "특검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검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졌다"며 "만약에 공소 취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것(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만약 조작임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공소 취소·기각은)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판단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앞서 최 전문위원이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특검이 뭘 하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법사위가 공취모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가을의 마지막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5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호수공원에서 붉게 물든 단풍 아래 낙엽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내년 예산 15조9000억 편성… 민생·복지·미래산업 집중 투자

올해보다 3.8% 5740억 증액

인천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5740억원(3.8%)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2조1533억원, 특별회계는 3조7467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올해보다 7801억원(12.4%) 늘어난 7조769억원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넓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8744억원으로 0.4% 증가했으며, 법정·필수 경비는 약 11조4000억원으로 늘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의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의 변화,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책임 있는 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투자 분야별 규모는 ▲민생회복·시민체감형 복지 강화 8조2000억원 ▲미래 성장 분야 약 6000억원 ▲인프라 확충·원도심 혁신 2조4000억원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 2조8000억원이다.

특히 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회복과 체감형 복지 강화에 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과 농어촌의 민생경제 회복에는 6543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원과 이차보전금 126억원으로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62억원과 어촌뉴딜3.0 사업 45억5000만원을 통해 어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한다.

또한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ABC+E) 등 첨단산업 육성에 3166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2687억원을 배분했다. 내년에는 산업 거점 조성과 실증, 타당성 조사,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 투자 유치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교통 기반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1384억원,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974억원, 원도심 활성화에 2287억원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1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인천의 산업 경쟁력과 교통 여건, 역사·문화 자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현장 애로 분석·개선안 제시

경기도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애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위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처럼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가 적용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시간·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관련 제도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로봇을 이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도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적용하고 있어,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특성에 맞게 '지능형주차장'을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